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254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7. 21. (제 14 차)	

(주)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은 성 수
제출 연월일	2021. 7. 21.

1. 의결주문

(주)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하며,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 제출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별지>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.

2. 제안이유

(주)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과 (舊)「은행법」에서 정한 여신거래시 부당한 담보·보증 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 1>

-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준법감시인의 임면 등) 제6항, 제28조(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) 제2항, 제43조(과태료) 제2항 제6호

-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(과태료 부과기준), [별표2] 과태료 부과기준(제34조 관련)
- (舊)「은행법」 제52조의2(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) 제1항 제2호, 제3항, 제69조(과태료) 제1항 제9호
- (舊)「은행법 시행령」 제24조의4(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) 제4항, 제3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[별표4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1조 관련)
- (舊)「은행업감독규정」 제88조의2(부당한 담보 및 보증 요구 금지 등) 제3항 제1호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제1항,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 제1항,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제1항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제1항 내지 제3항, 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
-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제1항, 제3항, [별표3] 과태료 부과기준

다. 제재내용 공개안 : <붙임 2>

라. 관계부서 협의

☐ 제21차 제재심의위원회(2021.6.10.) 심의필

<별지>

(주)전북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☐ 기관에 대한 조치

- (주)전북은행 : 과태료 3,000만원* 부과

*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

- 조치 사유 : 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(과태료 1,200만원)
②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
(과태료 1,800만원)

- 법적 근거 :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제6항, 제28조 제2항, 제43조 제2항 제6호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, [별표2] 과태료 부과기준(제34조 관련)

(舊)「은행법」 제52조의2 제1항 제2호, 제3항, 제69조 제1항 제9호

(舊)「은행법 시행령」 제24조의4(개정법규 제24조의5) 제4항, 제31조, [별표4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1조 관련)

(舊)「은행업감독규정」 제88조의2 제3항 제1호

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 제1항, 제3항, [별표3] 과태료 부과기준

2. 조치사유

가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

□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

- (주)전북은행은 2016.10월~2018.2월 기간(이사회결의일 기준)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*가 자기자본이익률 달성도(ROE 달성도)와 상대적 총주주수익률(상대적 TSR)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고

* 총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은 80%, 장기성과급은 20%의 비중임

- 단기성과급 조정지표*가 총자산수익률(ROA), 자기자본이익률(ROE)과 액면현금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기준을 마련·운영한 사실이 있음

* ❶ ROA가 負인 경우 단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, ❷ ROE 또는 액면 현금배당수익률이 다른 금융지주 평균의 75%에 미달하거나 100%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성과급 부분의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

나.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

□ (舊)「은행법」(2020.3.24.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(이하 '(舊)「은행법」') 제52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- (주)전북은행(○○지점 등 4개 영업점)은 2011.8.31.~2018.8.31. 기간 중 △△△△△등 4개 차주에 대해 대출금액 합계 41억 6,600만원의 여신(5건)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 8개사에 각각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하여 체결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

<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관련 대출명세 >

(단위 : 백만원)

연번	점포	차주	취급일	대출금액	연대보증내역	
					연대보증인 (계열회사)	보증금액
1	○○	△△△△	2011.8.31.	200	☐☐☐	260
					◆◆	260
2	△△△	◇◇◇	2014.12.17.	200	△△△△	240
					☐☐	240
3	☐☐☐	☐☐☐☐	2015.12.31.	1,000	○○○	1,200
					◇◇◇◇	1,200
4	☐☐☐	◆◆◆◆	2015.12.31.	2,136	●●●	2,563
					☐☐☐☐	2,563
5	◇◇	☐☐☐	2018.8.31.	630	▨▨▨	756
					△△	756

< 붙임 1 >

관계 법규

□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

제25조(준법감시인의 임면 등) ① ~ ⑤ (생략)

⑥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제28조(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) ① (생략)

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,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준법감시인"은 "위험관리책임자"로 본다.

③ ~ ④ (생략)

제43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~ 5의2. (생략)

6. 제25조제6항(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

7.~10. (생략)

□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3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[별표 2]와 같다.

[별표2] 과태료 부과기준(제34조 관련) < 2017.10.19. 개정 >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금액
모. 법 제25조제6항(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제2항제6호	3,000

□ (舊)「은행법」(2020.3.24.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52조의2(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) ① 은행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"불공정영업행위"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□ (舊)「은행법」(2017.4.18. 법률 제148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69조(과태료)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9.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

□ (舊)「은행법 시행령」(2019.12.31. 대통령령 제3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24조의4(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) ①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(이하 "불공정영업행위"라 한다)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~7. (생략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영업행위 및 은행이용자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

제3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6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

<별표4> 과태료 부과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금액
처. 은행이 법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 제9호	3,000

□ (舊)「은행업감독규정」(2019.12.31. 금융위원회고시 제2019-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88조의2(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 등)③ 영 제24조의4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영 제24조의4 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로 본다.

1.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

□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

부칙 <제17112호, 2020.3.24.>

제12조(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한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.

□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

제3조(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)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.

-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.

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(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17조(과태료의 부과)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.

제19조(과태료 부과 및 제척기간)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(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)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.

□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」

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

1. 당사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과 주소
 2.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,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
 3.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
 4.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
 5.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(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)
 6.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(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)
 7.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,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.

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□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

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 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-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 과징금 부과기준 및 <별표3>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3조(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)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·부당행위의 정도, 고의·중과실 여부, 사후 수습 노력, 공적, 자진신고,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③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별표 3> 과태료 부과기준

3. 예정금액의 산정

가.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.

위반결과 \ 동기	상	중	하
중 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
보 통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
경 미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	법정최고금액의 20%

※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중대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(「방송법」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·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·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
- (2) 보통 : ‘중대’, ‘경미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
- (3) 경미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

※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상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- (2) 중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
- (3) 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< 붙임 2 >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(주)전북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21.8.10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과태료 3,000만원 부과
임원	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주의 상당) 통보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

(주)전북은행은 2016.10월~2018.2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*가 자기자본이익률 달성도(ROE 달성도)와 상대적 총주주수익률(상대적 TSR)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고

* 총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은 80%, 장기성과급은 20%의 비중임

단기성과급 조정지표*가 총자산수익률(ROA), 자기자본이익률(ROE)과 액면현금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·운영한 사실이 있음

* ❶ ROA가 負인 경우 단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, ❷ ROE 또는 액면 현금배당수익률이 다른 금융지주 평균의 75%에 미달하거나 100%를 초과하는 경우 단기성과급 부분의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

<관련 규정>

1.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제28조

(2)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

「(舊)은행법」 제52조의2 제1항 제2호, 「(舊)은행법 시행령」 제24조의4(개정법규 제24조의5) 제4항 및 「(舊)은행업감독규정」 제88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은행은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◇◇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11.8.31.~2018.8.31. 기간 중 △△△△등 4개 차주에 대한 총 5건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

<관련 규정>

1. (舊)「은행법」 제52조의2
2. 「(舊)은행법 시행령」 제24조의4
3. 「(舊)은행업감독규정」 제88조의2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은행과 금융정책과	특수은행검사국
연 락 처	02-2100-2676 02-2100-2833	02-3145-7205